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03863호

참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P 공항가는길 주차장 무료셔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세차무료(외부) 주차비저렴
Tel. 744-1199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

漢拏日報 제900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2월 3일 화요일(음력 11월 7일)

투자진흥지구 해제 속출… "옥석 가려야"

공사 중단·착공 지연 등으로 13곳 지정 해제
해제와 달리 지정 신청은 요건만 맞으면 가능
총량제 도입 등 제주상황 맞는 '개선책' 절실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신청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어 총량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2002년 4월 1일부터 제주에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관광호텔업이나 종합휴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지시설업, 외국교육기관 등을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에서 진행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다. 지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진행하며, 지정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워진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숙박업소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을 지연하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곳이 13곳에 달한 것이다.

현재 96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대 16만7840㎡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하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지난 10월 29일 내린 상황이다. 회복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가 고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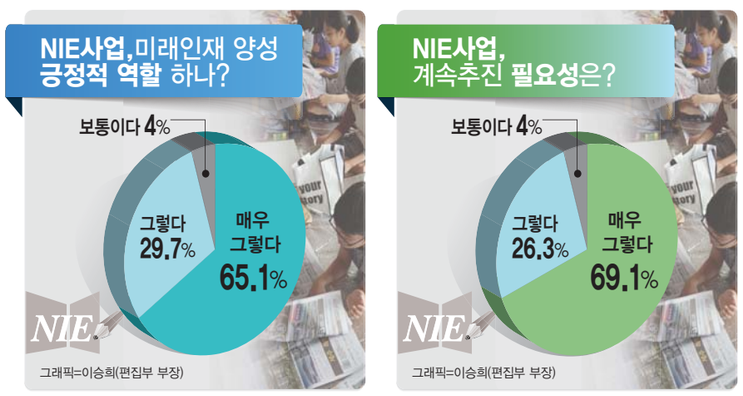
반면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지정 해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 부문에서도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시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도 고용이나 투자실적, 과잉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양적 투자에서 질적 투자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은 지정되고 숙박시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총 43개 사업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NIE사업 "잘하고 있다"

본보, JDC와 함께하는 NIE사업 설문조사 결과
95% "미래 인재양성 긍정 역할"… 교육적 효과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고 있는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사업'에 도민들이 '잘하고 있다'며 호응을 보냈다.

특히 NIE 사업이 교육적 효과는 물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됐다.

이는 지난 10월 26~27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제11회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전시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학생·학부모 175명)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보와 JDC가 올 한햇동안 운영한 NIE 사업(지면연재, 스크랩공모전, 전시회)의 효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민들은 NIE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8.3%가 NIE 사업 추진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61.7%, '잘하고 있다' 36.6%)'며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들은 NIE의 교육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봤다. 94.8%('매우 그렇다' 71.4%, '그렇다' 23.4%)가 'NIE가 학교 현장(수업,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에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NIE 사업이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도 94.8%('매우 그렇다' 65.1%, '그렇다' 29.7%)'였다. 응답자들은 개선·건의사항으로 학교 현장에 NIE 수업을 확대해 달라는 바람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도민들은 NIE 사업을 지원하는 JDC에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95.4%가 'JDC의 미래인재 양성 노력이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95.4%가 '한라일보와 JDC가 NIE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매우 그렇다' 69.1%, '그렇다' 26.3%)'고 답했다.

이와함께 NIE 사업 중 더욱 확대·보완해야 할 사업으로 'NIE 스크랩 공모전'이 1순위(응답률 47.4%)로 꼽혔다. 이어 지면연재(24.6%), 전시회(23.4%) 순이었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개선

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

제주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특산물 해상운송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내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이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

따끈한 어묵 국물의 유혹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그치며 찬바람이 시작된 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을 찾은 시민·관광객들이 김이 모락모락 솟아 오르는 어묵·옥수수 좌판을 찾아 어묵과 함께 국물을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는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기획 7면… 한국 해녀를 말하다 / 9면… 책 읽는 학교